
 인천광역시		설 명 자 료		 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	
		배포일자	2023년 7월 6일(목) 총 3매		
담당 부서	복지정책과	담 당 자	• 복지정책팀장 • 담당자	공 석 조귀환	☎440-2911 ☎440-2912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<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기자회견> **유정복 시장 취임 1년 복지정책 평가관련 설명자료**

- 인천형 소득보장정책 제도개선, 예산확대, 홍보강화 등을 통한 대표적 소득보장 정책 시행 -
- 적극적인 인천형 소득보장 정책시행 및 인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개편방안 마련 -

7월 6일(목)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유정복 시장 취임 1년 복지분야 평가와 관련한 설명자료입니다.

□ 제기된 주요내용

- 디딤돌 안정소득 재산 기준 완화, SOS 긴급복지 기준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인천형 소득보장 정책 시행
-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 부재
- 중앙정부의 정책에 소극적 대처

□ 설명내용

- 현재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딤돌안정소득과 SOS 긴급복지 대상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확대할 경우 최저임금과 역전 상황이 발생하여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원칙이 무색해질 우려가 있어 더 확대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.

○ 또한, 디딤돌 안정소득, SOS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이미 완화하여 시행 중에 있어 현재 시점에서 추가 완화는 어려움.

- 2023. 기준완화 시행 현황

구 분	디딤돌 안정소득	SOS 긴급복지
시행일	2023. 5. 1	2023. 3. 1
주요 내용	- 재산기준 완화 : 135백만원 → 204백만원 ※ 주거공제 신설(69백만원)	- 재산기준 완화 : 300백만원 → 369백만원 ※ 주거공제 신설(6,900만원) - SOS 생계비 지급율 인상 : 26% → 30%

- 타 시도 대비 지원 가구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소득 재산기준도 서울을 제외하고 최상위 수준임

*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비교

[기준 : '23. 5. 31.]

구분	인천	서울	부산	광주	전북	대구	세종
지원가구	235가구 315명	4,782가구 6,170명	105가구 132명	133가구 217명	95가구 124명	108가구 157명	5가구 5명
소득 재산기준	• 중위소득 50%이하 • 재산 204백만원이하	• 중위소득 47%이하 • 재산 155백만원이하	• 중위소득 45%이하 • 재산 135백만원이하	• 중위소득 50%이하 • 재산 160백만원이하	• 중위소득 50%이하 • 재산 135백만원이하	• 중위소득 50%이하	• 중위소득 44%이하

* 지역형 긴급복지 사업현황

[기준 : '23. 5. 31.]

구분	인천	서울	부산	대구	광주	울산
소득 재산기준	기준중위 85% 재산 369백만원	기준중위 100% 409백만원	기준중위 85% 350백만원	기준중위 100% 350백만원	기준중위 85% 261백만원	기준중위 80% 241백만원 -주거공제한도 적용(31.000)
'22년 추진실적	1,843건 15.8억원	20,841건 92억원	1,342건 11.4억원	2,500건 10억원	536건 4.8억원	360건 3.5억원

-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5.7%로 8대 특광역시 중 4위임

(단위 : 명, % / '23. 5월말 기준)

특·광역시	인구수	수급자수	수급률(순위)	광역시	인구수	수급자수	수급률(순위)
전국	51,400,521	2,509,099	4.88%	인천	2,978,089	169,892	5.70%(4)
서울	9,418,885	419,496	4.45%(6)	광주	1,425,739	95,950	6.73%(2)
부산	3,309,261	231,861	7.01%(1)	대전	1,445,221	76,214	5.27%(5)
대구	2,357,032	151,293	6.42%(3)	울산	1,106,446	42,724	3.86%(7)

○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추진

-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군·구 자율적·주도적 정책으로 인천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
- 이를 통해 정책이해도 제고, 여건진단 전문가 컨설팅, 선진지 견학, 우수사례 공유, 예산지원 등 군·구의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지원단 운영을 통한 생활밀착형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였음
- 2023년에는 돌봄사각지대 제로를 위한 부서별 돌봄사업 내실화를 목표로 지역자원 및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발굴·지원 공모사업” 추진과 “인천사서원 종합재가센터 운영개선”으로 민간기관이 기피하는 고난도·긴급 돌봄사례 지원도 강화하였음
- 또한, 2023년 돌봄욕구조사 및 서비스 개발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내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분석하고 돌봄 필수사업 발굴·추진의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중임

○ 중앙정부 시범사업 신청

- 보건복지부는 노인, 장애인,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방향을 노인 의료-돌봄 연계강화로 변경하고 2023년 2월 노인 의료-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공모하여 12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였음
-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군·구의 노인 중심의 돌봄사업 개발 및 공모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였고 관내 2개구가 신청하여 1개구는 1차 심사에 합격하고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최종 선정되지는 못하였음
- 향후에도 인천시는 중앙부처에서 공모·시범하는 사업에 市·군·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신청할 예정임